

전주시내버스 파업 대책 마련 '총력'

시,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출근 시간대 불편 예상 지역에 마을버스 투입·택시 증차 운행 등 나서

전주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파업으로 인해 전주시가 파업 노선에 마을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주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이하 노조)의 노사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시작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파업이 지속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2차 파업을 예고했으며, 실제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등 2개 버스회사 노조원은 오전 6시부터 31개 노선에서 88회를 미운행했다.

이에 시는 노조원 버스 배치계획을

사전에 파악했으며, 유일여고와 중앙여고, 전북여고 학생들이 주요 통학노선으로 이용하는 송천·아중지역 시내버스가 다수 결행이 예상됨에 따라 학교 측과 협조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했다.

특히 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마을버스 2대를 긴급 투입해 이마트 예코시티점부터 송천 삼거리까지 반복 운행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조는 지난 21일 첫 번째 파업과 달리 이번 2차 파업에서는 막차 시내버스 추가 결행을 예고했으며, 이에 시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 유관기관 등

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했다.

시는 막차 운행 시간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적은 만큼 택시조합에 해당 시간대 증차 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민들 귀찮길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향후 파업이 지속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파업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전일여객·시민여객 사측과의 2024년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전 7시부터 9시 시간대에 일부 노선의 버스를 2회 미운행하는 1차 파업을 단행했으며,

이날 추가로 2차 파업에 나섰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노사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의 피해가 시민들께 그대로 전달되고, 이에 따라 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노사가 협상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시내버스가 빠르면 시내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과 전주시 교통정보센터(www.jonju.go.kr), 전주시버스 어플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결행 노선을 안내하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통해서 문의 전화에 응대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노송동 소재 원불교 한등근교당이 지난 24일 노송동 주민센터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소외계층 위한 따뜻한 나눔

원불교 한등근교당, 노송동에 성금 200만원 기부

노송동 소재 원불교 한등근교당이 지난 24일 신속 봉불식을 거행하며 노송동 주민센터(동장 채월선)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부하는 전달식도 진행했다.

한등근교당은 교화활성화를 위한 교화정책으로 '동전주교당'과 '노송교당'이 통합해 새로운 불도당을 신축하고, 교단 4대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봉불을 올리는 역사적인

교당으로 노송동에 자리잡은 만큼 앞으로 노송동주민센터와 협력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채월선 노송동장은 "이웃돕기 성금 기부 및 관내 학교에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큰 도움이 되어주어 감사하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김옥기기자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주시, 4월 1~30일 접수

전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 또는 6학기 이내 휴학생으로,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며, 올해부터 생애비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전주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

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을 오는 6월 중 확정해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신청 여부와 상환금액은 지원 완료 후 오는 6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대출계좌별로 지원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사회진입 전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

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지원 방식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형태로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종택 기획조정국장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홍보를 통해 전주시 학생들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완산로타리클럽, 우이2동에 400만원 상당 이불·밀키트 전달

전주완산로타리클럽(회장 정진호)은 25일 전주시 우이2동 주민센터(동장 김태원)를 방문하여 400만원 상당의 이불과 밀키트를 전달했다.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나눔봉사를 실천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꾸준히 적극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이불 25채와 밀키트를 전달했다.

정진호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봉사과 나눔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전주완산로타리클럽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동장은 "매번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보내 주시는 전주완산로타리클럽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대병원, 결핵 예방의 날 맞아 결핵 예방·퇴치 홍보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2024년 결핵예방의 날(매년 3월 24일)을 맞아 지난 22일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앞 이동통로에서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결핵에 대한 인식의 개

선과 경각심 제고, 그리고 결핵검사와 치료, 기침예절 실천 등 행동변화를 위한 홍보 시행으로 결핵예방 및 퇴치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감염관리센터와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



전북대학교병원이 2024년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서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와 보호자, 직원들에게 결핵과 잠복결핵의 차이, 다제내성결핵, 올바른 기침예절, 생활 속 결핵 예방수칙 등을 전달하고 결핵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O.X 퀴즈 행사를 통해 결핵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였고 설명을 끝까지 듣고 퀴즈에 참가한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결핵은 결핵균으로 인한 호흡기감염 질환으로 주로 폐결핵을 유발시키며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결핵균에 감염된다.

결핵의 가장 흔한 증상인 기침은 감기 등 다른 호흡기질환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2~3주 이상의 기침과 발열, 수면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 및 치료해야한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봄철 공업지역 대기오염원 집중 지도·점검

전주시가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봄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공업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도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중점사업장을 선정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첨단감시정비인 드론을 활용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위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팔복동 공업지역의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여부 △대기 자가측정·운영일지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11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예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환경감시용 드론 활용을 병행해 주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 9개 항목)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기오염 우려 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사업장의 관심도와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주·야간과 휴일 취약 시간대까지 빈틈없는 감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팔복동 공업지역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을 활용해 △소각시설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악취 발생·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연중 감시한다.

시는 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용삼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 오염 사각지대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오염인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